

이슈브리프

No. 2025-06(S)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유럽: 한국-유럽 정책의 선명화 필요성

김세미

부연구위원

2025-10-01

이 이슈브리프는 “이재명 정부의 대유럽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유럽의 관계는 주로 무역과 가치에 기반해 왔으며, 협력의 폭은 넓지만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유럽은 경제적·규범적 파트너로 주로 인식되어 왔고, 방위·안보 협력은 최근에서야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전략적 요소가 주변적 차원이 아니라 대유럽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심화되는 미·중 경쟁,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의 동맹 접근, 러·북 협력이 보여주는 유럽-인도-태평양 연계성 확대는 한국이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대유럽 정책을 채택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유럽 전략은 한국에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협력의 지속적 심화를 가능케 한다. 이를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는 유럽의 위상을 핵심 파트너로 재정립하고, 확고한 정치적 약속, 구체적 안보 협력, 네트워크형 조정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한국과 EU·NATO·주요 유럽 국가와의 관계 진화, 변화하는 국제 환경이 요구하는 한국-유럽 간 긴밀한 상호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유럽 정책을 위한 세 가지 정책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유럽 정책: 경제 및 규범적 협력 중심

한국의 대유럽 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유럽은 단일 행위자가 아니라 EU, NATO, 개별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EU, NATO, 그리고 양자 협력이라는 세 가지 트랙을 통해 접근해 왔다.

한국-EU 관계는 △2010년 기본협정 △2011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2016년 위기관리 참여협정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무역 중심의 협력이 주를 이루었으며, EU와 체결한 첫 아시아 FTA를 기반으로 교역은 2010년 600억 유로에서 2022년 1,320억 유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EU의 열 개 전략적 동반자국 중 하나가 되었고, 민주주의·인권·비확산·기후변화 등 규범적 가치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 최근에는 2024년 한-EU 안보·방위 동반자 협정 체결을 계기로 안보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NATO와의 관계는 2005년 대화 개시 이후 2010년 아프가니스탄 ISAF 파병과 아덴만 대(對)해적 작전 지원을 통해 심화되었다. 2023년부터는 4개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안보, 신기술, 기후변화, 방산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이 구조화되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NATO 정상회의 참석, 연례 군사대화 신설, 2024년 국방장관 회의 첫 참여 등을 통해 파트너십이 전략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양자 차원에서도 협력은 강화되었다. 2023년 11월 영국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경제와 규범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의 기반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유럽 접근은 여전히 경제·규범적 협력이 중심이었으며, 안보와 전략적 차원은 최근에 들어서야 강화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역시 유럽을 “가치 기반 외교와 경제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에는 충분했으나, 변화하는 유럽의 안보 환경과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은 보다 전략적이고 안보 중심의 대유럽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대유럽 정책의 필요성

미국 동맹국 간 연대

한국과 유럽이 보다 긴밀한 전략적 연대를 요구받는 배경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미국이 전통적으로 맡아온 안보 보장자이자 다자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서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이 동맹을 점점 더 거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직접적 위협은 다르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유럽을 유사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동맹국들은 자국 역량 강화와 미국의 후퇴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 증액은 자율적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공약의 공백 가능성을 드러내 적성국의 도발을 자극할 위험도 수반한다.

이런 맥락에서 동맹국 간 긴밀한 전략적 연대는 미국의 후퇴가 초래할 불안정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한국은 이를 통해 대서양 동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글로벌 안보 기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유럽과의 공조는 한국이 집단적 목소리에 동참하여 워싱턴에 동맹 결속의 가치를 각인시킬 수 있게 한다. 이는 억제력을 높이고 동맹 분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

협력은 방위 영역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개발 원조, 기후변화 거버넌스, 다자기구 지원 등에서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규범적 위상, 그리고 한국의 확대되는 거버넌스 기여는 상호 보완적이다. 양측이 접근을 결집할 경우 규범 기반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양측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북한 위협 대응

보다 전략적인 대유럽 접근은 북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철거를 통해 유화적 의도를 보였고, 이어 핵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역량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며, 당분간의 우선순위는 미국의 지속적 관여를 전제로 한 긴장 완화에 둘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은 주요 이해당사자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유럽은 오랫동안 ‘비판적 관여’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 비확산 규범 준수, 인권 증진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이는 한국의 접근과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일부 EU 회원국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한 역시 여러 유럽 국가에 공관을 운영한다. 유럽은 비확산·군비통제·인도적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단계적 계획 중 첫 단계인 핵 동결을 지원하면서 최종적 비핵화라는 목표와 연계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유럽 각국은 북한의 러시아 밀착 심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의 유럽 금융기관·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유럽이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함을 보여주며, 북한 문제를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를 잇는 전략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방산 협력 강화

한국의 대유럽 전략적 관계 심화는 유럽이 대규모 국방력 증강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려 전개된다. 이는 한국에 무기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럽-대서양 안보 네트워크에 깊이 편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며 유럽 국가들의 대러 방위력 강화를 지원해 이익을 얻고 있으며, 폴란드의 K2 전차 2차 물량 구매 등 대규모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편되는 유럽 방산 구조 속에 편입함으로써 한국은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하며(이 중 3.5% 핵심 방위), NATO 회원국들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안정적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공동개발, NATO 기준 채택, 유럽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방 현대화를 강화하고 서방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 무기 공급자를 넘어 구조적 파트너로 격상될 수 있다. 성패는 합작 법인 설립, 현지 조립·생산, 기술 공유 등 현지화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와의 계약은 현지 생산과 지원 허브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

유럽에게 한국은 방위산업 협력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EU 전체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회원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역 안정, 항행의 자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유럽 내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인도·태평양에 투입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전략적 여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개입을 뒷받침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예컨대 한국이 유럽 해군과 합동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연대를 과시할 뿐 아니라 상호운용성을 제고한다. 또한 해상 교통로와 해저 인프라에 대한 위협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양안보 상황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상호 이익으로 이어진다. 유럽은 자원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개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파트너들에게 전략적 신뢰성을 높여준다. 반대로 유럽의 참여는 한국의 대북 억지 태세를 강화하며,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더 넓은 민주주의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단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전략적 영향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

정책 권고안

보다 확고한 정치적 약속

이재명 정부는 대유럽 접근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권고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중 첫째는 보다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서 출발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은 대러 제재와 비살상 지원을 통해 유럽의 강력한 지지 국가로 부상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

다음 단계는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참여다. 이는 한국이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참여는 반드시 전투 병력 파병을 의미하지 않으며, 평화유지군 파견이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집단안보 기여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대러 제재는 지속해야 하며, 단기간 내 관계 정상화로 비칠 수 있는 행보는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잃고 방산 협력의 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NATO-IP4 틀 내에서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NATO와 EU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존재감을 유지하고자 하며, 한국은 이를 유럽과 연결하는 가교로서 기여할 수 있다. 향후 NATO-IP4 정상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인도-태평양 내 별도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한국이 확고한 정치적 약속을 실천하는 가시적 조치가 될 것이다.

보다 명확한 안보상 관여

둘째 권고는 안보상 관여의 심화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유럽 해군의 순방과 연합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영국 항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인도-태평양에 전개되어 일본, 미국, 호주와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한 뒤 부산에 기항해 한국과 합동훈련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국적 훈련 불참은 일본과 호주에 비해 낮은 가시성을 초래했고, 유럽이 자연스러운 안보 파트너로 이들 국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개입 경험은 향후 북한 전술과 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 NATO 동맹국들과의 방위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역할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전쟁의 교훈을 주제로 한 합동 분석과 모의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를 정례적 군사협약에 통합한다면 한국은 북한 전술 변화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일 뿐 아니라, 공동 안보 학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유럽에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형 조율

셋째 권고는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rdination)의 강화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IP4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유럽 내 광범위한 연대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이들 국가는 AUKUS, 파이브 아이즈, GCAP 등 협력 틀을 통해 유럽에서 전략적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장점이다.

물론 한국은 NATO 및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했고, 특히 동유

럽과의 방산 협력에서는 일본이나 호주보다 앞선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는 여전히 양자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 소다자적 틀에 편입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거래적 파트너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력을 "소다자화"하여 네트워크형 구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 영국과의 3자 대화를 통해 방산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공유하거나, 주요 NATO 정상회의에 앞서 IP4 협의를 제도화해 공동의 인도-태평양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유럽 내 확고한 입지를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장기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

이제 이재명 정부는 유럽을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일부는 무역과 가치 중심의 느슨한 관계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미·중 경쟁 격화와 러·북 협력 심화로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모호한 접근은 불가피한 대가를 초래한다.

안보 협력의 불균형은 일본이나 호주와 비교해 한국을 2차적 행위자로 보이게 만들며, 무역·방산 중심의 관계는 정권 교체나 규제 변화에 취약하다. 한국이 유럽의 전략적 계산에서 중요 고려 대상으로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전장 경험 축적과 같은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주도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반대로 전략적 접근은 실질적 이익을 제공한다. 한국은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과 다자기구 내 영향력 확대를 확보할 수 있다. 확고한 정치·안보적 연계와 IP4 네트워크형 협력을 통해 한국은 유럽과의 관계를 장기적 안보와 정치 협력에 뿌리를 둔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세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유럽관계,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중견국외교 등이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원에서 비상임 펠로우,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상임 펠로우, 미국 퍼시픽 포럼에서 상임 펠로우로 재직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학 학사,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5-08).

(“Europe as a Strategic Partner: The Case for a Sharper South Korea–Europe Policy”)